

전남도 사활 건 인구 늘리기...다자녀 출산 지원에 집중

지역재생산지수는 전국서 가장 높아 인구정책 '다자녀 우대' 항목 신규 적용 소멸위험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도 총력

전남이 지역 인구 늘리기에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미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도내 가임여성들의 2자녀 이상 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업, 교육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전남은 또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원특별법'이 무엇보다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구 감소지역에 정부 재정 지원 규모를 보다 늘리는 선제적인 정부 조치를 건의하고 있다.

◇지역소멸위험지역 전남 '지역재생산지수'는 가장 높아=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지역소멸 위험지역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을 제외한 18개 지역이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가임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며,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재생산지수에서는 전남이 1.33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지역재생산지수는 1년간 총출생아 가운데 2자녀 이상인 출생 비율을 출생 가능 여성인구 비율(15~49세)로 나눈 값이며, 지수 값이 1 이상이면 지역에서 인구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모두 1 이상으로, 특히 보성이 2.59로 가장 높고, 신안(2.49), 고흥(2.42), 완도(2.08), 구례(2.06), 함평(2.05), 진도(2.01) 등 7개 군이 2를 넘었다. 지역재생산지수에는 서울이 0.73으로 최

하위를, 세종이 0.76으로 16위였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지역 인구 성장 잠재력 개선을 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 시책을 확대하고, 모든 인구 정책에서 '다자녀 우대' 항목을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 지표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높은 국회 문턱-지역소멸위험지역 지원 특별법 5개 발의=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경북도와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 같은 요구와 건의를 국회와 정부가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미루면서 동력을 얻지 못했다. 전남도는 다시 2월중으로 국토연구원에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방소멸지역 지정, 추진체계, 재정지원 검토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율성을 강화한 특별법 기본체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3월에는 정정사항을 제외한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행안위, 법사위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원 특별법은 현재 모두 5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다. 서삼석 의원(2020년 6월), 이원택 의원(2020년 7월), 배준영 의원(2020년 8월), 김승남 의원-김형동 의원(2020년 9월) 등이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인구 감소비용, 김승남 의원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비용을 각각 적용 지역으로 했지만, 이원택·배준영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은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등을 제외하는 안이다. 국고보조금 보조비율 우대,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 지역활력산업 육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강화, 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례, 사회간접자본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그린수소 포럼 온라인 창립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원, 주거지원,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 19의 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국가불균형의 시정"이라며 "현재의 행정안전부 부총리급의 국가균형발전부으로 확대 개편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과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백신·치료제·한국판뉴딜...총리가 직접 챙긴다

정부, 적극행정 171개 과제 선정

정부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적극행정 과제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한국판 뉴딜 등과 관련한 171개를 선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분기별로 범부처 회의를 직접 주재해 이들 과제의 진척 상황을 챙기기로 했다. 소극행정에 대한 선 수시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71개 적극행정 과제에는 백신·치료제 공급(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국토교통부), 전기·수소차 확대(산업

통상자원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환경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실무 단위 회의는 격주로, 총리 주재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 이들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연 2회에 그쳤던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수시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오는 7월 소극행정 제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호한 규정·지침에 대한 부처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컨설팅' 최신 기준을 현재 30일 내에서 15일 내로 대폭 줄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한다. /연합뉴스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선별·전국민 지급 함께 협의...추경 편성"

국회 본회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 드리겠다"며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펴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지급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 대표는 "주택 공공성을 높이며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낙연표 '신북지체'도 구상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도 공개했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 도달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을 40%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노인 요양시설을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정책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10대 입법과제 등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 이 대표는 "기억하는 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거짓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만 다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선별·보편 동시지원 주장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또 "2월 추경 편성은 이르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적극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대상을 지원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훌륭한 방향 제시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방법론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지나 이제 신속한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적극 환영한다"며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유리바닥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국민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내는 일

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필요하다면 선별뿐만 아니라 보편 모두 시행하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말씀 주신 '신북지체'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상상연대 3법,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등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관계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인해 국민적 짜증과 분노가 깊어지는 때,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에 대한 진지한 모색으로 집권당의 역할을 보여주셨다"고 했다. /연합뉴스

#사람중심 #스펙초월 #AI면접 #광융합산업SC

2021 전략산업

온(ON)택트 취업박람회

www.gwangjujob.net

에서

여러분의 **희망 일자리**를 만나보세요

2021. 2. 15 ~ 2. 26 (2주)

참가방법



참여혜택

- 시·도의면접 & 피드백 (청년잡희망팩토리)
- 직업상담, 이력서 및 자소서, 면접 클리닉 (청년잡희망팩토리, 토닥토닥청년일자리카페)
- 기념품 증정 (선착순 지급)

주관



후원



문의사항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부 062.605.9614/9612

